

# 정부, 녹색기후기금 유치 적극적

## 인천, 사무국 유치 놓고 경쟁 ... 사무실 무상임대에 운영비 지원

기획재정부는 4월15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신청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임시사무국에 제출했다고 4월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GCF 사무국 유치전에서 독일, 멕시코, 스위스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2011년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17)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유치 의사를 밝히고 GCF에 4000만유로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스위스도 1차 이사회를 자국에서 열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임시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허리역할을 맡게 된다.

UNFCCC 당사국총회는 2010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15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모금해 개도국의 산림 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10월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기금설계방안을 마련했고, 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이 참여하며 한국은 개도국에 포함됐다.

선진국이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지,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2012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총회(COP18)에서 결정된다.

2020년 GCF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직원은 500명에 달하고 사무국은 남아프리카 더반 총회에서 정한 대로 GCF에 법인격, 특권면제, 재정·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인천시는 9월 완공되는 국제기구용 빌딩(I-Tower)의 15개 층(2만1500㎡)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회의실을 연간 20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시설과 전기·수도비용도 지원해준다.

정부도 GCF 운영비로 2012년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달러를 지원한다.

또 2014-17년 개도국의 역량 구축을 위해 총 4000만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내놓으며 운영방식은 GCF와 협의할 방침이다.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 조치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GCF 기구 자체에 법인세를 줄이고, 직원은 UN 관련기구나 외교관 신분에 준하는 세금면제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7>